



2017년까지 환경공공데이터 81% 국민에 개방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데이터베이스 적극적 개방 추진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그동안 영업비밀, 연구목적, 여론악화 등의 이유로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지 않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공공데이터를 2017년까지 81% 수준으로 적극 개방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방되는 환경부 보유 공공데이터는 전체 168개 데이터베이스(D/B) 중 총 136개다. 이중 2013년 말까지는 전체의 55%인 52개 D/B를 개방할 계획이다. 이는 2013년 현재 범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률 16.1%와 2017년까지의 개방 목표인 44.9%를 모두 상회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먹는샘물 영업자의 법령 위반내역, 전국 약수터 등의 수질 정보와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 조사결과 등은 온라인상에 수시로 그 결과를 공개했지만 원천데이터를 가감 없이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전국 실내 라돈조사 결과의 원자료를 공개해 실내 라돈 분포, 지역이나 건물 유형별 특성 정보를 가공 없이 제공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먹는물관리시스템을 통해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위반내역과 우리 동네 약수터·샘터·우물

등의 수질정보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물종동정시스템을 통해 전문가의 연구 지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미지를 통해 정확한 생물종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내 생물종의 서식지, 학명 등의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생물학계와 연구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행정3.0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작고 소소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겠다.”며 “모든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 시에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통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고 만족하는 환경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환경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환경행정 3.0의 핵심은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책과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